

## 기후위기 관련 성인지적 대응을 위한 이슈 발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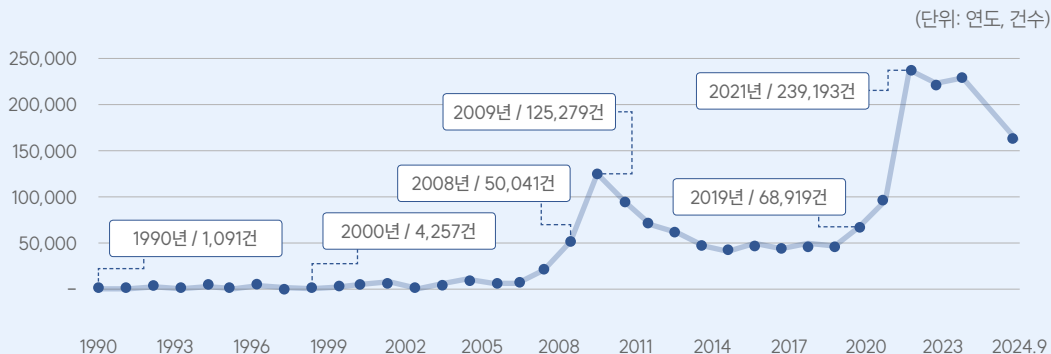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연구위원

### 들어가며

#### 기후위기... 폭염과 폭우·가뭄 등 자연재난 피해 심각

- ✓ 2024년 여름 최장기간의 열대야(24.5일)와 폭염(30.1일)이 발생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됨.<sup>2)</sup>  
-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재난으로 인해 폭염, 폭우, 가뭄 외에도 온난화로 인한 녹지 고사(枯死)와 물 공급의 불안정성 등이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함.<sup>3)</sup>
- ✓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 보도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국내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보도량과 주목도가 대폭 확대됨.<sup>4)</sup>

연도별 기후위기 관련 언론보도 건수(1990~2024.9)



- ✓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며, 성별 내 연령대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20대 이하에서, 남성들은 60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5)</sup>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성별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 본 원고에서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을 바탕으로, 전문가델파이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본 원고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장윤선·김들순·윤지소·김신아·이성준·박현정·이안소영·김은희·채혜원·서연화(2024).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II):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2024년 기상청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나"는 질문에 90.1%가 '그렇다'라고 응답(소년한국일보(2024-06-06), 국민 90% "기후변화 실감...위기 앞에 놓여있다"(<https://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1>, 검색일자: 24.10.14))

3) 20세기 초에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언론 기사로 뉴질랜드 '로즈니 앤드 오타마테아 타임즈'(1912년 8월 14일자)에서는 "전 세계의 용광로에서 해마다 석탄 20억톤이 불탄다.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70억 톤을 배출한다. 공기는 지구를 뒤덮는 장막이 돼 온도를 올린다. 수 세기 안에 효과가 매울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한국일보(2021.08.14.), 100년 전 신문에 실린 '지구온난화' 예고 ... 경고는 생각보다 빨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219540000966>, 검색일자: 2024.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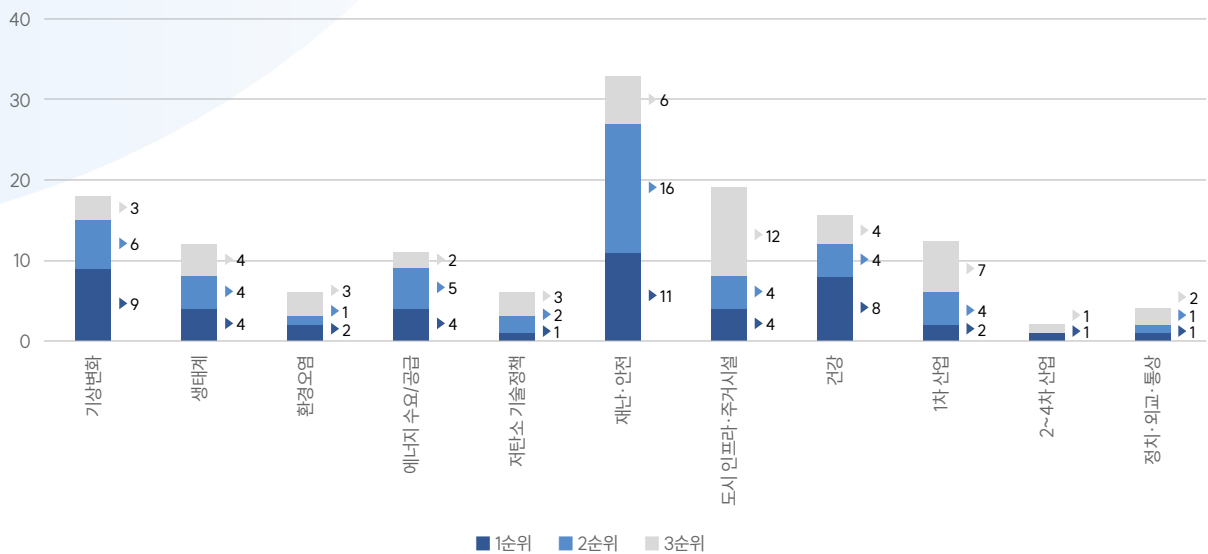
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관련 기사를 검색, 분석함

5)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를 본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대별로 재분석한 결과임

## 전문가가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역, 장애여부, 돌봄 여부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11개 분야를 검토함.
- 이 중에서도, 기후재난과 안전, 도시 인프라와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농·어·축산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적응·완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조사됨.

기후위기 완화·적응 정책이 필요한 분야(1~3순위)



-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완화·적응정책이 필요한 8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 1순위로 선정된 주요 항목(영향 요인)들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두 연관되어 다양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적 기후위기 완화·적응정책이 필요한 분야 및 항목

분야	주요 항목	분야	주요 항목
기상변화	폭염, 폭우, 홍수, 기온상승	재난·안전	취약계층 피해 증가, 하천시설 붕괴, 교통시설 손상 및 교통사고 증가
생태계	해수면 상승, 해수표면 온도상승, 침수지역 증가, 종의 이동 및 멸종, 동물 서식지 축소	도시인프라·주거시설	도시 열섬효과, 물 공급 불안정성 증가, 교통시설 기능 저하
환경오염	대기질 악화, 식수염 오염, 해양 산성화	건강	온열·냉열 질환 증가, 인수공통 감염병 증가, 빈곤지역 건강취약성 증가
에너지 수요·공급	전력 생산비용 증가, 전력 공급 불안정성 증대, 전력수요 변화	1차 산업	농업생산성 감소 및 품질 저하, 식량가격 안정성 악화, 수산업 생산성 저하, 농작물 재배시기·적지 변화

## ● 재난·안전분야 :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영역

- 재난·안전분야는 기후위기 관련 11개 분야 중 다양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나타남.
- 하천, 배수시설, 산사태, 교통시설 손상 및 사고, 건축물의 침수, 화재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생겨나는 안전 문제와 더불어 노후 건축물이나 인프라의 붕괴는 미래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는 재난 시 식수·식량 부족, 건강 관리, 피난시설 접근에서 생존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특히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커지면서 사회적 약자의 존립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 ● 건강 분야: 기후위기로 인한 신체·정신 건강의 복합적 위협

-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기후위기의 영향을 우려한 건강 분야의 주요 영향 요인은 온열·냉열 질환 증가, 인수공통 감염병 증가, 빈곤 지역 건강 취약성 증가 등으로 조사됨.
- 폭염으로 인해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야외노동자와 발농사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온열질환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유병 장수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돌봄 노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이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각종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 외에,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질환의 증가는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함.

## ● 도시 인프라·주거 분야

- 다양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분야의 1순위 중 세 번째로 많은 응답 분야인 도시 인프라·주거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시 열섬효과, 물 공급 불안정성 증가, 교통시설 기능 저하, 비도시지역 및 빈곤층 물 부족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함.
- 온난화로 인한 녹지의 고사(枯死)와 물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영유아, 노약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물 이용의 제약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직결되며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보호자 역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함.
- 도시의 오래된 배수시설은 침수 위험을 증가시켜 침수사고에서 성별과 연령, 장애, 직업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려함.

## ● 1차 산업 분야

- 식량문제와 직결된 1차 산업의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주요 영향으로 농업생산성 감소 및 품질 저하, 식량 가격 안정성 악화, 수산업 생산성 저하, 농작물 재배 시기·적지 변화, 국내 고유·특산종 멸종을 제시함.
-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은 기후위기에서 생산량의 감소와 품질의 저하, 가격 상승 등 식량안보와 함께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로 인한 생계 위협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함.
- 농작물 재배시기와 적지의 변화는 소농과 여성농업인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농업생산 기술과 노동력 활용의 불확실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 폭염 등 작업환경의 악화와 해충 위험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악화 외에, 축산업의 경우 가축 스트레스와 감염병 확대에 따른 집단 폐사 등에 따른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또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제안함.
-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소득 보장 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성농업인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보장의 필요성이 제시됨.

## 전문가 전망

- 기후위기가 다양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연령대와 거주지 유형(수도권 및 대도시, 농산어촌)에 기반한 총 6개의 사례를 구성함. 각 사례는 과거부터 2050년 미래 시점까지의 삶의 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제시하였음. 이 사례들을 참고하여, 기후위기가 다양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46명의 패널은 다음과 같이 응답함.
- 폭염 속 수도권(및 대도시) 거주민의 삶과 기후위기 적응방안
  -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 확대
    - 기존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이들 외에 영유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돌봄 및 돌봄노동자, 야외노동자 등 직업적 특성, 주거 형태 등에 따라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 있음을 강조
  - 폭염 등으로 인한 야외활동 제약
    - 폭염 및 대기질의 악화는 영유아 및 기저질환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야외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비장애 청장년층의 야외활동도 어렵게 할 것임.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야외활동 제한은 운동 및 활동량 감소로 인한 근골격계 건강 악화, 사회활동 제약 및 고립으로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주거 취약계층(쪽방촌이나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노후 주택 등)의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노출
  - 전력공급의 어려움이나 전기료 부담 등 에너지 사용이 어렵거나 냉방시설의 미비로 폭염 시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공기정화장치가 없어 건강 악화 우려가 있음. 특히 여성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 문제로 환기도 어려워 폭염 등의 상황에서 더욱 취약함.
- 야외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안전, 건강의 문제 제기
  - 수도권(및 대도시)에서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하역노동자, 이동노동자, 가구방문 서비스 노동자 외에도 노점상이나 재래시장 상인 등은 다양한 야외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이들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호장비 및 보·냉장구 지급, 쉼터 제공, 노동시간 조정, 휴식 보장 등의 작업장 예방수칙 마련 및 관련 법규의 제정과 함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 제시
- 화재, 정전, 폭우 피해 등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 또는 이동 중 대피해야 하는 상황
  -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적 약자의 대피상황을 돌보는 보호자 및 돌봄역할 담당자들은 오히려 대피가 늦어져 취약하고, 이외에 언어 및 인지, 시·청각장애가 있거나 외국인 등 언어장벽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보로부터 소외될 위험이 큼.
-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이동 제한이나 가뭄 등으로 인한 수질악, 물부족 상황
  -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미래 도시의 먹거리 문제는 이후에 살펴볼 농어축산업 분야의 생산 감소와 생산단가 상승 등과 맞물려 먹거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전염병 및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방식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의 학습권 제한 및 학력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외에 노인나 장애인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신체·정신 건강 불안정 야기
- 재난 대응 매뉴얼 및 교육 필요
  - 기후위기는 급격한 폭우나 폭설, 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재난 상황에 따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임산부, 장애인,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1인 가구 등 대상자별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규 교과과정뿐 아니라 성인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책을 적용하여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더위쉼터나 대피시설, 이밖에 관련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설계 및 보완이 필요함.

-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도시 녹지 공간 확대 필요

- 초고층 건물로 바람길이 차단되면서 대도시의 열섬현상이 폭염을 가중시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옥상정원,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 녹지공간 확대가 필요함. 도시 텃밭 조성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 식물 재배를 통한 심리 안정 등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도권 및 대도시의 기후위기 전망

- 전문가 조사 결과, 급속한 기후위기 진전 속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다만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기후정의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적응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가능할 것임.

미래 기후위기와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다양한 삶의 전망

기후위기 상황		현재	미래 전망
기상변화		• 정부의 지역별 안내문자 발송	•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발전으로 개개인 상황에 적합한 기후재난 대피 안내
	폭염	• 야외 활동 자제	• 필수 노동과 이동 가능하나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독려
	폭우·홍수	• 주거시설 취약 시 대피 필요, 야외 활동 불가	• 주거 복지를 통해 주거 안정성 강화, 치수계획 및 시설 강화에도 연안지역이나 저지대 등의 일시적 대피 상황 발생 가능
	대기질	• (계절적) 대기오염 심각	• 실내 - 공기정화시설 강화로 실내공기질 향상 • 실외 - 오염물질에 따라 가감 영향
	가뭄	• 노후 상수관 등 수질 문제, 일부 식수 제한 조치	• 식수 공급·수질 문제 확대
에너지 공급		• 에너지 비용 지속적 확대, 경제적 취약·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가중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생산단가 효율화 - 공급은 확대되나 사용량 증가로 비용 부담 상존
식량 공급		• 농수산·축산물 생산량 저하 및 가격 상승	• 20~21세기 초 생산되던 과일·채소·곡물 등 식물성 식품, 수산물, 축산물 생산 어려움 > 식생활 변화 불가피
주거/녹지 공간		• 도시 재개발로 녹지공간 축소	• 지역별 주거 및 녹지 공간 양극화
공공시설과 서비스		• 성별·연령·장애·인종·직업 등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 부족	• 지역별 공공시설과 서비스 양극화
건강, 보건·의료		•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 증가	•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 돌봄의 양극화,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노노케어, AI·로봇의 돌봄기능 확대 등)
대피		• 영유아·노인·장애인 및 돌봄자 대피의 어려움	• 시설 양극화로 인한 문제 확대, 긴급재난 시 공동체 상황에 따라 피해 다름
이동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등 활용, 보행장애자의 이동 어려움	• 미래 모빌리티 변화로 이동 개선, 그러나 이동수단 활용의 양극화 예상, • 이상기후는 이동 시 제약으로 작용
안전		• 치안 안정, 젠더폭력 문제	• 치안 안정, 젠더폭력 문제
성평등		• 성평등 문화 확산과 반발(backlash),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성별 임금격차 등	• 성평등 문화 확산,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및 돌봄 가치 중시, 문화 다양성 격차

## ●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산어촌 지역 거주민의 삶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

- (시설 접근성)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기반 시설 이용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주거 측면) 컨테이너, 농막, 창고, 비닐하우스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하며, 노후된 빈집의 붕괴 사고 등 주거 안전에 취약함.
- (에너지 측면) 도시가스 접근이 어려워 석유나 연탄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료 부담과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폭염 시 냉방기 사용도 어렵고, 냉난방시설조차 없는 경우도 있음.
- 수자원 고갈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산촌 지역은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림의 건조화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산간지역 주택 중에는 화목보일러 사용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큼. 산간 지역의 고령 여성은 재난 대응 역량이 부족함.
  - 귀농·귀촌인의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낮아 산불 등 기후재난에 더욱 취약함.
- 기후재난 시 사회적 약자 대피의 어려움
  - 폭염·폭우·폭설·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영유아·노인·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는 주변의 도움 없이 대피하기 어렵고, 외딴 지역의 1인 가구나 가족돌봄자, 돌봄노동자 역시 극한 기후에 매우 취약함.
  -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질병 발생 시 의료시설 접근성도 낮아 생명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기후위기와 정부지원, 스마트팜 중심의 농정 문제점
  - 대규모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팜은 청년농과 선도농가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기업이 진출해 대량생산체제로 구축되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팜도 여름철에는 실외보다 내부 온도가 더 높고 식물 생장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투입하고 화학성분의 투입재와 농약을 사용하는데,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의 질도 나쁘고 음용시설 및 화장실 설치가 미비로해 농업노동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함.
  - 또한 로컬푸드에 기반한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존의 토경 재배 농가, 소농·고령농·전통농·생태농·여성농민 등 다양한 농가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로컬푸드 중심의 대안적 농식품 체계의 마련과 지원책의 추진 필요

- 농어촌의 여성 농어업인 현황과 관련한 문제

-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기계를 사용하는 논농사 보다 수작업이 많은 밭농사 비중이 높고,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 찌뜨가무시 등 해충의 증가로 병충해 피해뿐 아니라 농약 사용으로 인해 농약 중독의 우려가 제기됨. 또한 폭염 시 높은 지열로 인해 온열 질환나 피부병 질환 비중이 높음.
- 농어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용허가제에 따른 (계절)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폭염·한파에 취약한 주거 및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성폭력 등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월경·임신 등 여성건강권과 관련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농어업 등 생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지역 돌봄과 복지의 주요 담당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돌봄과 복지 활동은 마을회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운영 인력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그 결과, 식사 준비 등 돌봄 업무가 부녀회장 등 여성 주민들에 의해 무보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돌봄을 넘어 지역 주민 돌봄까지 책임지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음. 또한 여성 농업인은 소농이거나 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생계를 위해 농어업 외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례도 많아, 농어업인 정책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에 따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나 지역 여성농민회 등에서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등록' 허용과 겸업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초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산어촌지역은 돌봄의 문제

- 농산어촌 지역은 공간 밀도가 낮아,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의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큼.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함. 또한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냉난방시설이 부족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

- 기후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 지원 필요

- 상품작물 중심의 대규모 단작화로 인해 농촌 내 먹거리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조차도 개별 도축이 어려워,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 상점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식재료 접근이 어려움. 이에 따라 농산어촌 맞춤형 먹거리 꾸러미, 농번기 밥차 등 실질적인 식품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농산어촌 지역은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앞으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기후난민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생존을 위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이주민들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2050년경에는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 인구의 다수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위기가 농산어촌에 미치는 2차 영향 대비

-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어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농어업인구 축소 예상
- 인구감소는 다시 유통, 보건·복지, 교육 등 관련 기관과 시설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 농어촌은 단순히 거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뿐 아니라 국가적인 먹거리 식량 생산공간으로서, 산촌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각별한 보호 필요

- 2050년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산어촌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특히 현재도 농산어촌에서 지속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는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기후위기와 농산어촌지역의 다양한 삶의 전망

기후위기 상황	현재	미래 전망
기상변화	• 정부의 지역별 안내문자 발송	•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발전으로 개개인 상황에 적합한 기후재난 대피 안내
	• 폭염	• 필수 노동과 이동 가능하나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독려
	• 폭우·홍수	• 연안지역이나 저지대의 침수, 산촌의 산사태 등 일시적 대피 조차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
	• 대기질	• 실내 - 공기정화시설 강화로 실내공기질 향상 • 실외 - 오염물질에 따라 가감 영향
	• 가뭄	• 식수 공급 및 수질 악화(개선 미비) • 농업용 용수 매우 심각
에너지 공급	• 에너지 공급 및 비용 부담 가중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생산단가 효율화 - 공급은 확대되나 사용량 증가로 비용 부담 상존
식량 생산 및 공급	• 농수산·축산물 생산량 저하 및 가격 상승	• 20~21세기 초 생산되던 과일·채소·곡물 등 식물성 식품, 수산물, 축산물 생산 불가 > 1차 산업 유지 어려움. 새로운 생산 방식 개발 필요 • 생산·유통 어려움으로 식량 유통체계 등 새로운 공급방법 모색 필요
주거/녹지 공간	• 주거시설 노후화, 취약성	• 공공 주거시설 확대로 주거 안정 • 온난화로 인한 산간지역 화재위험 가중
공공시설과 서비스	• 공공시설 부족, 이동 장시간 소요	• 거주민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필요
건강, 보건·의료	•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 증가	•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노노케어, AI·로봇의 돌봄기능 확대 등), 보건·의료시설 부족 및 이동 어려움
대피	• 영유아·노인·장애인 및 돌봄자, 외국인 등 대피의 어려움	• 시설 양극화로 인한 문제 확대, 긴급재난 시 공동체 상황에 따라 피해 다름
이동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등 활용, 보행 장애자의 이동 어려움	• 미래 모빌리티 활용 양극화 예상 • 이상기후는 이동 시 제약으로 작용
안전	• 여성 노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젠더폭력 문제	• 치안, 젠더폭력 문제 심각
성평등	•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잔존	• 다문화, 성차별 혼재, 돌봄 가치 이중 잣대

## 다양한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인지적 기후위기 대응 이슈

-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모든 사람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또한 1인 가구 증가나 고령화로 인한 생태계 위기, 에너지, 노동, 돌봄 등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이 필수적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현재 뿐 아니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보다 기후재난과 안전, 도시인프라와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에의 영향 큼
- 수도권이나 대도시
  -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인구구조·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다면화
  - 기후재난(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상황별·주체별 매뉴얼 개발, 보급에 주력
  -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동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공공사회서비스, 기후보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중장기 방안 마련
- 농산어촌
  - 지역 인구 감소(소멸)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사람 중심의 대안모색
  - 지역 균형발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성별영향 분석,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확보 및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등 대표성을 제고하여 기후위기 대응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 지원 다각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차적 젠더이슈를 발굴하여 성인지적 정책 수립 필요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

- 사회 전체를 '젠더렌즈'로 들여다보는 관점의 대전환 : 공동체성, 시민의식, 돌봄의 공공성, 생태정치, 공유경제, 생태 경제, 에코 페미니즘 등의 가치 확산
- 미래 인구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성인지적 복지 인프라 강화
- 기후위기 대응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의 주체성 강화, 다양한 목소리 반영
-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별영향 분석 및 젠더이슈 발굴
- 탈성장·축소사회로의 이행 준비와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모색